

문화도시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과 의의

박종달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장

문화도시 추진계획 수립 배경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쇠퇴한 지역을 재생하고, 주민의 문화 활동과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지역 발전을 이끄는 문화도시들이 전국에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 절차에 착수하였다. '문화도시'란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로,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 법적 근거: 「지역문화진흥법」 제14조(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 구성/임기: 위원장 1인을 포함해 20인 이내/2년(연임 가능)
 - (위원장) 문체부 장관 지명
 - (위원) 지역문화정책,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건축 및 도시계획 전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 직무
 - ① 지자체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 및 추진실적 심사
 - ② 문화도시의 지정·취소·변경에 관한 사항
 - ③ 지정된 문화도시 지원과 관련된 사항 등

인구감소,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지역 쇠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00세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출현과 일과 삶의 균형, 여가에 대한 정책적 기대와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문화를 통해 쇠퇴한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문화도시 정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럽연합이 1985년 그리스 아테네를 시작으로 가맹국 도시를 대상으로 '유럽문화수도'를 지정

하고 지정 지역의 재생과 대외 이미지 향상, 유럽 공동체 상호교류를 추진해 온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낙후된 산업도시에서 문화예술 축제와 복합문화 지구 활성화를 통해 프랑스 4대 도시로 성장한 릴(Lille), 가난과 실업으로 쇠락한 항구도시에서 비틀스로 대표되는 예술도시로 재탄생한 영국 리버풀(Liverpool), 지역 단위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가죽 등 지역 전통의 장인산업을 고도화하여 도시 성장 요소로 활용한 이탈리아 볼로냐(Bologna) 등이 유럽문화수도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그밖에 영국 게이즈헤드(Gateshead),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일본 나가하마(長浜)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은 도시재생 과정에서 문화적 관점의 계획을 수립해 문화중심의 공간과 도시 재구성에 주력해 왔다.

우리 정부도 2004년경부터 광주·경주·전주·공주·부여 등을 국가 정책 관점에서 지역거점 문화도시로 지원해 왔으며, 2014년부터 ‘문화특화지역 사업’을 통해 전국 50여 곳 도시와 마을의 문화 활성화 사업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도시 브랜드 구축과 지역민의 문화활동 거점 마련 등 그동안 도시문화 관련 사업들이 이룬 성과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반 미비와 사업의 체계성 결여 등 한계가 지적되어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로써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기존 사업 경험과 지역의 의견을 기반으로 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계획 전반을 체계적으

로 지원하기 위해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문화도시 정책의 목표와 방향

이번 계획은 지역이 고유의 문화를 활용하여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문화를 통해 쇠퇴한 장소와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즉 ▲지역 사회 주도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역 고유의 문화가치 증진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문화의 창의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문화적 도시재생과 접목한 사회혁신 제고를 4대 목표로 하여,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화도시 정책 비전과 목표

비전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및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	
목표	지역 사회 주도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역 고유의 문화가치 증진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문화의 창의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문화적 도시재생과 접목한 사회혁신 제고

특히 이번 계획은 대규모 시설 조성과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지역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문화환경을 기획하고 실현해 나가는 장소·콘텐츠·인력 분야의 지

문화특화지역 사업 사례



천안 아트큐브 페스타



남원 오픈스튜디오



청주 시민문화네트워크

역문화발전 종합계획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즉 사람과 콘텐츠 등 ‘문화적 소프트파워’가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도시의 문화생태계 조성 과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 주도나 관 주도의 상의하달식 지원이 아니라 지역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출발하는 문화정책을 지원한다. 각 지역이 각분야 리더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도시문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중심·시민주도형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문화도시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지역의 새로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문화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각 지역이 고유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 민·관협력에 의한 컨설팅, 문화도시 간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관점에서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살리는 문화도시 지정 제도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도시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

문화도시는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역사전통·예술·문화산업·사회문화 중심형과 지역 자율형 등 분야별로 지정된다. ▲역사전통 중심형에서는 지역의 역사, 문화재 등 전통적 자산을 ▲예술 중심형에서는 문학, 미술, 연극 등 예술 창작과 향유 활동을 ▲문화산업 중심형에서는 영상, 게임 등 문화와 산업의 융·복합 과정을 ▲사회문화 중심형에서는 생활문화, 여가, 인문정신문화 등 시민사회의 문화활동을 각각 활용해 성장을 추구하는 도시를 선정한다. 이 외에도 ▲분야별 융·복합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지역 자율형 분야를 따로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자체는 각 지역이 중심적으로 추진하려는 대표 사업 또는 추진 전략을

문화도시 지정 분야

기본 분야	관련법 근거	세부 분야(예시)
역사전통 중심형	「문화재보호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역사, 전통 등
예술 중심형	「문화예술진흥법」 등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등
문화산업 중심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영상, 음악, 게임, 출판, 광고, 만화, 대중문화예술, 문화 콘텐츠 등
사회문화 중심형	「지역문화진흥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생활문화, 여가, 인문, 문화교육, 다문화, 시민문화 등
지역 자율형	문화도시 조성 관련법 일반	기본분야 융·복합, 생태문화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예시

1 역사전통 중심형

- 지역의 역사, 자연환경, 문화재 등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특화된 문화 브랜드를 구축하고, 사회·문화·경제적 성장을 추구하는 도시
- * (이탈리아 볼로냐) 전통으로 이어져 온 가족 장인산업을 도시성장 요소로 활용

2 예술 중심형

-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동을 중심으로 창조적인 도시문화를 형성·공유하고, 도시의 사회·문화·경제적 성장을 추구하는 도시
- * (영국 게이츠헤드) 공공미술이 도시의 상징적 아이콘이 되어 관광명소화

3 문화산업 중심형

- 문화와 산업의 융·복합 과정에서 펼쳐질 수 있는 다양한 사회활동을 촉진하며, 문화산업을 통해 사회·문화·경제적 성장을 추구하는 도시
- * (프랑스 앙굴렘) 영상만화단지·박물관, 세계적 만화페스티벌 등을 통해 만화도시로 브랜드화

4 사회문화 중심형

- 생활문화·여가·인문정신문화 등 시민사회의 문화활동을 증진하고, 문화적 표현의 존중과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활동 촉진을 통해 사회·문화·경제적 성장을 추구하는 도시
- * (프랑스 베슈렐) 고서적과 중고서적 등을 파는 책마을 조성을 통해 독서를 통한 인문공동체 활성화 및 사색과 휴식을 위한 관광명소화

기준으로 지정 분야를 정하되, 지정 신청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 속하는 사업들도 복합적으로 포함하여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정 분야는 지자체별로 특성화된 계획을 수립하고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침으로 운용되며, 분야별 지정 도시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문제부는 내년부터 매년 5~10개의 문화도시를 지정해 2022년까지 약 30개의 문화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원한다. 정부는 도시 활성화 효과가 성공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장소(hardware) 콘텐츠(contents) 인력(humanware) 분야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즉 지역 내 쇠퇴한 유흥장소를 도시의 문화적 활동이 집중되는 문화 허브로 재구축하고,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창작·창업·향유·교육·복지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며, 지역 민과 청년이 문화도시를 이끌 문화 리더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문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사업계획을 각 지역이 통합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토록 정부가 일부 사업비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예산의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문화도시 사업 추진 일정

2019년 제1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문제부의 공고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해 올해 8월 말까지 문제부에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문제부는 올해 10월경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하고, 지자체가 추진한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실적을 토대로 2019년 하반기에 5~10개 규모로 제1차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제1차 문화도시 지정 절차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문제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 공고와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 추진

한편 문제부는 문화도시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을 연계하여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 문화적 도시재생이 촉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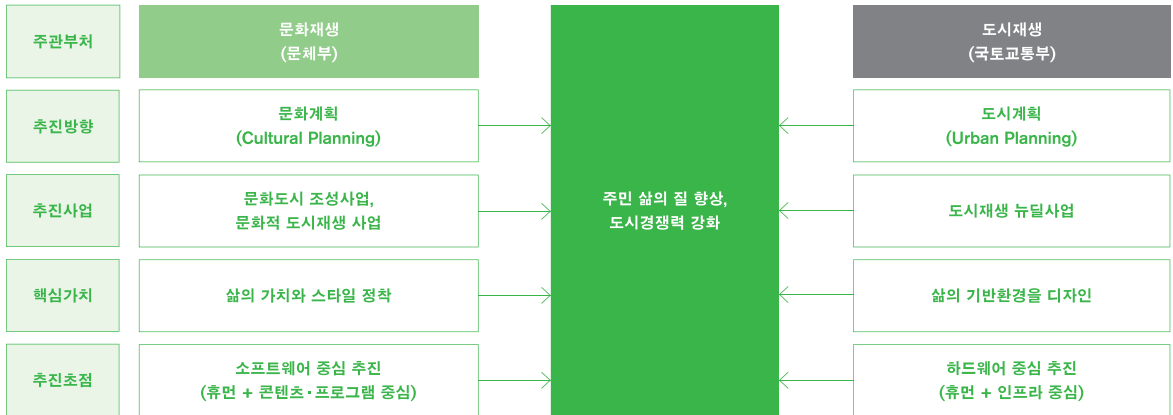
기존 도시재생의 경우 물리적인 환경 정비와 재개발에 집중하면서 도시의 지속성과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제는 도심에 내재된 역사와 기억, 건축물의 의미 등 도시재생의 인문학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및 지역발전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문화재생 사업이란 도시의 문화적 가치와 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활동을 통해 침체된 도심의 기능을 다시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재생을 통해 원주민, 도시를 떠났던 예술가, 청년들이 모여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문화적 공동체의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즉 문화재생은 무분별한 물리적 개발의 부작용을 막고, 도시에서 ‘장소기반의 문화’를 만드는 정책과 사업이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 절차



문화도시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의 연계 추진 계획



문체부는 문화도시 조성을 통해 쇠퇴한 도심의 문화 재생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를 통한 협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도 ‘문화도시와 연계한 뉴딜 사업지 선정·지원 및 뉴딜 사업지와 연계한 문화도시 지정·지원’ 등 협업 방안을 명시하였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기반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 하드웨어 중심으로 추진된다면 문화재생은 문화적 삶의 장소로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적 자원과 콘텐츠, 프로그램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게 돼 상호 구별된다. 즉 문체부는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으로 삶의 가치와 스타일을 정착하는 문화계획을 지원하고,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삶의 기반 환경을 디자인하는 도시계획을 지원하며 정책적 협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나가며

도시는 오랜 인류 역사가 누적된 산물이며, 인간과 사회가 만든 문명들의 집합체로 설명되곤 한다. 즉 도시의 모습은 도시에 사는 주민들의 역사와 생활상, 가치를 담고 있다. 근대 산업화 과정에서는 건물 신축이

나 도로 확장 등 빠른 양적 성장이 도시 발전의 척도로 인식되었고, 도시공간의 경제적 효율과 일터로서의 역할이 중시되었다. 그러나 근대 산업이 쇠퇴하고 인구 구조가 변동하면서 이제는 도시가 삶터이자 쉼터, 놀이터로서 기능을 균형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이번 문화도시 정책을 계기로 각 지역이 장기적인 문화계획을 수립하여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쉬고 즐기고 싶은 질 높은 장소를 만들고,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문화도시가 생성·확산되기를 기대한다.